



인권 도시 대전은 멈출 수 없다

대전시장과 교육감의 인권 공약 살펴보기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 이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대전시는 7월 1일부터 시장과 5개 구 중 4개 구의 구청장이 바뀌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지점이다.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며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그 결과가 시민의 삶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후보자들의 공약만 살펴보면 대전이 금방이라도 유토피아 같은 지역이 될 것만 같았다. 후보자가 내건 공약을 보면 당선 후 대전 시정과 교육행정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 대전 시민의 표심은 대규모 교통개발과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고, 학생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겠다는 공약에 기울었다.

시민의 선택인 만큼 공약 이행은 매우 중요하다. 4년의 임기동안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할 이장우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의 선거 공약 중 인권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전 시민 삶의 질 책임질 대전시장

이장우 시장은 최종 득표율 51.19%로 당선됐다. 이 시장은 '경제를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슬로건을 내걸어 '시장이면 경제 정책에 힘을 쏟을 것'임을 표방했다. 10개 주요 공약 역시 산업 용지, 도시철도 3~5호선 핵심 전략사업 육성 등 경제 분야 정책이 대부분이다.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예산의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

이 시장의 인권 관련 대표 공약중 노인과 장애인, 여성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경제 공약에 비하면 적은 예산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노인 정책으로 어르신 스마트워치 지원 △어르

신 병원 동행 도우미제 △1인 가구 안심 특별관리 프로그램 △노인 여가 건강복지센터 설립 운영 등이 있었다.

장애인 정책으로는 △장애인 안전센터 설립 추진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설 확충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확충 △교통약자 이동 편의 서비스 확대 △세계 장애인 노동인권 지도자대회 유치 △장애인 관련 조례 정비 등이 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을 약속하며 △경력단절여성 취업 장려금 지원 △여성 안심화장실(CCTV) 확대 설치 △맞벌이 가정 아침·저녁 급식지원센터 운영 △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보육 행정 도우미 지원을 내세웠다. 출산과 육아 중심에서 일자리 공약을 더해 여성정책을 만들었지만, 성평등 공약은 어렵다.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후보자들은 소속 정당의 정책 기조에 맞춘 공약을 내걸게 마련이다. 당연히 당선 후의 정책도 해당 정당의 정책 방향에 맞춰 갈 수밖에 없다. 이 시장은 대전 시정 운영에 중앙정부의 풍부한 인맥, 대통령의 전폭 지원 약속을 전면에 내세웠다. 대전이 이장우 시장 임기동안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룬다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먼저 인간 존엄을 강조하는 '전국 최고 인권 도시 대전'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뤄지길 바라본다.

교육 현장에서 더 중요한 인권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41.50%의 득표율을 얻으며 3선에 성공했다. 선거 슬로건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이다. 지난 8년, 앞으로 4년 총 12년 동안 대전 교육의 성격과 방향을 잡는다.

설 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지난 8년간의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설 교육감의 공약은 '미래, 혁신, 책임, 안전, 소통'의 5개 키워드로 요약된다. 장애 학생을 위한 정책으로 △대전특수교육원, 대전해둔학교 설립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들었다. 키워드로만 보면 매우 추상적이다. 구체적인 공약을 살펴보면 △다문화, 탈북학생 학교 적응 지원사업 확대, 통학차량과 통학비,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등 △특수교육 관

련 서비스 강화 △저소득층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확대 △전문가 활용 성폭력 예방교육비 지원이 인권 관련 공약으로 볼 수 있다. 아쉬운 점은 교육 현장의 정책 수혜자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나 교육시설 종사자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교육현장 종사자에 대한 정책이 없다. 학생을 위한 정책뿐 아니라 교육현장 종사자에 대한 인권정책, 인권경영이 필요하다.

인권 없는 최악의 선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난히 인권 관련 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선거 역사를 보면 선거 공약에도 시대의 흐름이 있었다.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였기도 하고, 안보가 가장 중요한 시기도 있었다. 민주주의의 정착 단계를 지나 세계화를 부르짖기도 했다. 선진국 대열 합류를 자신할 만큼의 수준이 되자 비로소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돌아보기 시작해 '인권 공약'이 풍부한 시기도 있었다. 그 결과 다양한 인권 정책이 실현되는 발판이 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출근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기간에 치러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선거라는 이슈 속에 타지역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거나, 해당 지역에서는 극명하게 의견이 분열되기도 했다.

인권의 키워드는 '차별 없는'이다. 피부색, 성별, 신체적 특징 등에 따라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인종에 따른 차별이 엄연히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여성에 대한 차별, 현대사회에서 두드러진 노인에 대한 차별, 장애인 차별, 정치 사회적 흐름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탈북자에 대한 차별 등은 법과 제도에 따라 엄격히 금지해 지켜야 할 사항이다.

인권 관련 공약이 없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이미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그나마 공약으로 약속한 정책은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이장우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은 지켜주기를 바란다.

조강숙 인권기자

 이 신문은 환경보호를 위해 재생원료를 배합하여 만든 친환경 용지와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였습니다.

꿀벌 구하기는 곧 지구 구하기

인류를 위협하는 꿀벌의 사라짐

2022년 뜨거운 5월, 대덕연구단지 화봉산에 아카시아꽃이 활짝 피었다. 그리고 꿀벌들이 아카시아꽃을 따기 위해 여기저기 날며 웅웅~ 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혹시나 벌침에 쏘이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올해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꿀을 따고 있는 벌을 한참을 바라봤다.

지난겨울과 올봄 사이 78억 마리의 꿀벌이 실종(폐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약 227만 개 벌통 중 약 39만 개 벌통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벌통 하나에 사는 꿀벌 개체수를 2만 마리로 추산하면 꿀벌 약 78억 마리라는 계산에 나온다. 이 때문인지 화봉산을 찾는 꿀벌의 개체수도 몇 년 전부터 확실하게 줄었다.

꿀벌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후변화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겨울철 벌통 안에서 월동해야 하는 벌들이 이상 고온 때문에 외부활동을 하다가 급격하게 떨어진 기온으로 인해 다시 벌통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속적인 꿀벌 개체 수 감소는 식량 수급 차질 및 환경생태계의 교란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식량과 환경의 위기를 초래한다. 꿀벌은 농약 환경 안전성 평가 지표 생물로 지구상의 식물 70%가 곤충에 의해 수정되는데 이 중 절반을 꿀벌이 담당하기에 꿀벌의 사라짐은 인류의 위협과 생존 위기로 이어진다.

꿀벌의 대규모 사라짐, 언제부터 시작됐나

꿀벌 집단 사라짐 현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2006년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보고된 이후 아프리카, 아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2007년 군집 붕괴 현상(Colony Collapse Disorder)으로 이름 지어졌다. 꿀벌이 동시다발적으로 집단 사망하는 이 현상은 꿀과 꽃가루를 채집하러 나간 일벌무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벌통에 먹이가 부족해 결국 벌통 하나가 사라지는 것으로 많은 벌통이 일시에 발생하여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바이러



▲ 주택의 마루바닥에 자리잡은 토종 꿀벌집이다.



스성 질병인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토종벌 90% 이상이 폐사했고, 2022년 전남 해남군을 시작하여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적 현상이었지만 특히 전남 남부지방이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사라진 78억 마리, 생태계의 나쁜 '내비효과'

안타깝게도 꿀벌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사라지고 있다. 지난겨울 우리나라에서 월동 중이던 꿀벌 가운데 39만 벌통에서 살던 78억 마리가 실종해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22년의 꿀벌 폐사량은 20%로 평년의 5-10%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전국의 꿀벌 피해는 전남이 43%, 광주 38%, 전북과 제주 31%, 대구 21%, 부산 18%, 강원 15%, 경남 14%, 경북 13%, 대전 10%, 충남 8%, 경기 2%, 충북 0.3%다. 대전지역은 10%로 피해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반면 유성 지역 배 농장관계자에 따르면 꿀벌이 아닌 사람이 직접 인공수분 배 농사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 모든 식물을 인공 수분하는 건 불가능하다. 꿀벌의 급격한 감소는 양봉 농가의 소득감소뿐 아닌 생태계 전반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아인슈타인은 '벌이 없다면 수분 과정이 없어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없다'고 했다. 지구 생태계를 위해 꿀벌 사라짐을 막아야 한다.

꿀벌 피해를 막기 위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꿀벌의 멸종을 막기 위해 인간은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카시아꽃이 전체 꿀 생산량의 70%로 꿀의 채밀이 한 시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 편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채밀할 수 있는 나무를 심거나 주변 꽃 심기 등을 통해 꿀벌의 채밀 활동이 골고루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비교적 농약사용이 적은 도심지역에 도심 양봉을 통해 꿀벌의 개체 수를 늘려가고 있다. 꿀벌에 해를 끼치지 않는 친환경 살충제를 개발하고, 기후변화에 강한 꿀벌종을 개발하여 꿀벌의 사라짐 현상에 대응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꿀벌의 멸종을 막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꽃 개화 시기에는 살충제의 사용을 자제하고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야생보다는 살충제 영향이 적은 도시 양봉을 시작했다. 또한 공공장소에 꽃을 심어 꿀벌의 안식처를 제공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태양광 패널 밑에 야생 꽃 심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2018년부터 5월 20일을 '세계 꿀벌의 날'로 정하고 매년 기념하고 있다.

환경의 위기, 지구온화 극복 방법

꿀벌이 사라지면 먹이사슬이 무너져 지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생물과 생태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꿀벌의 피해는 인간의 생존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앞서 보듯 꿀벌의 집단 사라짐의 원인은 기후 위기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꿀벌의 사라짐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중요하다. 앞서 제시된 대책들은 미봉책으로 기후 위기를 일으키는 지구온화 해결이 근본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지구온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인 탄소와 메탄가스, 아산화질소 등을 줄여야 한다. 탄소가 대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65%로 높아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거나 운송수단의 변화 등 대부분의 기후 위기 대책이 탄소 중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대책 역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메탄가스 줄이기다. 메탄가스는 대기 중에 머무는 시간이 다른 온실가스에 비해 12년으로 짧고, 온실가스의 17%나 차지하므로 이를 줄이면 단기간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메탄가스의 주요 원인이 되는 대규모 동물 사육을 줄이고, 인류의 식생활이 개선되어야 한다. 육류의 섭취를 삼가고 채식으로 식단을 변경하는 것이 메탄가스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식단의 변경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인류의 생존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글·사진 임선호 인권기자

인권에 관심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찾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글로, 일상생활 중 경험한 인권이야기, 독자투고에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인권도서 서평 등 인권 관련된 글이라면 가능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 대전!

보내주실 곳 djhr1210@naver.com 분량 1,000자 이내



생명, 평화, 협력으로 자연환경을 말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사무처장을 만나다

기후 위기와 함께 환경 이슈가 뜨겁다. 환경과 생태계는 인류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환경문제는 곧 인권 문제로 이어진다. 홍수, 가뭄, 폭염의 기후 위기의 영향은 비정규직, 경력단절 여성, 노인 등 약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한층 가혹하기 때문이다. 이상기후와 함께 대전에서 어느 때보다 활발히 활동하는 환경단체를 찾았다. 생태환경운동, 환경교육, 탈 원전활동 등 뜨거운 계절만큼이나 바쁜 시기에 지역의 환경운동과 기관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을 만났다.



▲ 월평공원내 습지형성 과정 및 생태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이경호 제공.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0년의 역사가 있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출발했다. 민간환경단체로서 1980년 후반 국가의 민주화 바람이 불어온 역동의 시기에 전국 각지 8개 지역에서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은 젊은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1993년 환경운동과 실천을 위한 전국적인 연합을 탄생했다. 현재 국내·외 생명의 현장에 전국 51개 조직이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전지역은 세 명의 공동의장과 고문, 감사, 집행위원 그리고 저(사무처장)를 포함 네 명의 상근 실무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진행하는 많은 사업 중 가장 중점 두는 부분은?

한 개를 선택하라면 매우 난감하다. 그럼에도 제 생각은 첫째 생명을 존중하는 일, 평화, 협력을 꼽겠다. 평화는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평화가 아닌가 싶다. 앞서 말씀드린 생명, 평화, 협력이 환경시민단체가 슬로건으로 내놓은 전부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자연환경이 무엇인지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

환경운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현장에서 시민과의 충돌될 때이다. 환경은 개발과 보존의 경계에 있다. 개발에만 관대한 분들에게 보존에 관해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래도 요즘에는 탄소중립에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많이 높아짐을 느낀다.

청소년들에게 환경운동에 관하여 소개를 하신다면.

그린피스를 생각해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그린피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환경보호단체로서 아마존 우림에서 북극까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을 항해하며 현장의 중요성을 알리고 면밀한 과학조사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다. 환경과 미래를 위해 행동하는 그린피스 정신이야말로 환경운동 보존의 시작이라고 소개하고 싶다.

대전에는 원자력과 관련된 기관들이 밀집된 곳이 많이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 이경호 사무처장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탈원전을 근본으로 한다. 국내에선 23곳의 원자력발전소가 존재하면서 특히 대전에는 원자력 시설 등이 다수 자리 잡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10년 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의 비극을 모두는 기억하고 있다. 여전히 폭발 사고로 인해 발생

한 사용 후 핵연료를 정리하지 못한 채, 극 오염된 방사능 오염수는 쌓여만 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쌓일 대로 쌓인 방사능 오염수를 이제는 바다 한 가운데로 방류하겠다고 한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국가는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수명연장 금지 제도화와 현실성 있는 안전대책 등을 강구해야 하고 지역과 국민은 지속해서 탈원전을 위한 건강한 감시와 정보제공 등 연대해야 한다.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 '월평공원 생태지도 만들기' 기사를 보았다. 모니터링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대전에서 흔히들 서구의 보물은 월평공원이라고 한다. 갑천 생태 놀이터는 우리 시민들에게 허파와 같은 존재이다. 대전의 보물 자원인 '월평공원습지'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였을 때, 생태환경의 우수성은 이미 입증되었다. 얼마 전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과 '대전 걷고 싶은 길 12'선에 선정되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통한 지역 홍보와 지역 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싶은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공원에는 멸종위기 종이 서식하고 있다. 직접 관찰하기도 했었고 제 기억에는 큰 고니, 수달, 맹꽁이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생태 해설사님 설명을 빌리자면 청명한 날에는 이곳에 반딧불이도 출몰한다고 하니 환경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 캠페인이 있다면?

350캠페인이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350ppm으로 낮추기 위해 전 세계 188개국 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지구온난화 방지 캠페인이다. '350 캠페인'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전환과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언론과 함께하는 캠페인, 기업과 함께하는 사회공헌사업, 청년들과 함께하는 서포터즈 활동 등 다양한 캠페인과 퍼포먼스를 수행하고 있다. '그린리더'라는 단어가 있다. 생소하지만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확정 발표 후,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리더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되었고 이를 '그린리더'라고 칭하고 있다. 요즘에는 '그린리더' 아카데미라는 강좌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과 관련된 교육 등이 신설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회적 변화라고 생각한다.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전환경교육센터를 대전광역시로부터 수탁받아 현재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운영하고 있다. 대전환경교육 종합 정보 플랫폼 구축, 맞춤형 종합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 특화사업 발굴 및 지원, 환경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대전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으니 다양한 세대가 심각한 환경문제를 인지하고 고민하는 자리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사무실 벽면에 붙어있는 대전환경운동연합 현수막 중간에 섞여 있는 "평화, 협력, 생명"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마음에 새겨진다. 시종일관 진솔하고 밝은 표정으로 함께한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사무처장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찾기로 했다. 독자들도 대전환경운동연합의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고 환경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자.

인권카드뉴스 누구나 안전할 권리 '노인 보호 구역'

누구나 안전할 권리
노인 보호 구역

'속도운전'에서 '안전운전'으로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노인 보호 구역'을 알고 계시나요?

교통약자인 **노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실시한 정책으로,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지정하여 **실버존(silver zone)**이라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 12조 2항
-시정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연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노인 보호 구역'을 알고 계시나요?

구역이 정해지는 기준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노인 보호 구역' 필요성

- 노인 보행자의 경우 보폭의 **속도와 반사신경이** 타 보행자에 비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보행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2019년 57.1%, 2020년 57.5%로 사고율이 **높아 보호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노인 보호 구역' 시행 결과는?

노인보호구역은 2008년 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존재조차 모르고, 알고 있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다르게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인 보호 구역' 시행 결과는?

과속단속카메라나 방지턱등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들이 강제가 아니기에 단속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인 보호 구역' 시행 결과는?

당사자인 노인들은 "노인보호구역임에도 보호받지 못하는데 왜 만든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운전자는 "오랫동안 운전했지만 노인보호구역은 처음 듣는다"와 같은 반응도 있었습니다.

'노인 보호 구역' 전국에는 얼마나?

-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은 1만 6천 여 곳에 달하지만 **노인보호구역은 2천 1백 여 곳에 불과하며** **대전 노인보호구역은 121곳 이** 존재합니다.
- 노인의 안전을 위한 노인보호구역이 더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노인 보호 구역' 처벌수위

가중처벌
- 주정차위반 범칙금 2배
- 신호위반 범칙금 2배

범칙행위
- 신호·지시위반, 보행자 보호위반, 주정차 금지 위반
- 속도위반

노인보호구역
시속 30KM 이하!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운전습관
함께 지켜나가요 :)

제작:박연수 인권원림이

운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알고 있지만 실버존으로 불리는 노인보호구역은 비교적 중요가 덜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보행사상자의 59%가 65세 이상 노령자로 나타나 노인 보행자 안전을 위한 노력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기억하고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주세요.

박연수 인권원림이단

동화속 인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스토킹처벌법의 현주소

인적이 드문 고개, 손에 든 광주리를 품에 끌어 안고 발걸음을 재촉한다. 뒤에 아무도 없는 걸 알고 있지만 자꾸 누군가가 따라오는 느낌이 든다. 평소와는 다르게 집이 멀게만 느껴진다. 공포를 억누르며 여기까진 따라오지 않겠지, 안심하려는 마음을 비웃듯 앞에서 불쑥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온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속 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쫓아와 협박하는 호랑이를 겁내며 집으로 달리지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 그날 밤을 견뎌냈더라도 다른 날을 말짱히 지낼 수 있었을까.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살며 많은 걸 잃은 삶을 살지는 않을까. 누가 나를 지켜보고 해를 끼치는 일은 명백한 범죄다. 바로 스토킹이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것 외에도 우편이나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사진 등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시행됐다. 이전에는 스토킹을 해도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범죄로 그쳤지만, 법이 2021년 10월 21일에 시행됨에 따라 징역형까지도 가능해졌다. 스토킹을 더 강한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스토킹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면식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또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가해자가 많이 알고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복 범죄를 생각하기 충분하다. 합의를 보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해 2차 가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기소 후 기각된 사례 중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기각된 경우가 많다.

온라인스토킹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점도 있다. 스토킹의 정의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는 부분이 있다.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내도 가해자가 해시태그 등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스토킹을 여전히 경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의 인식도 문제가 된다. 물리적인 피해가 없으니 어렵다, 여러 번이 아닌 한 번이니 방법이 없다 등의 대응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판결은 대면적인 방법이 아니라거나 반성하고 있다, 과거에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감형이 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직접적인 범죄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스토킹 행위가 있다면 가족들까지 피해자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범무부가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토킹은 그 자체로도 범죄지만 언제든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2차, 3차 가해도 이루어질 수 있다. 스토킹범죄를 줄이기 위해 법의 보완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사회의 인식도 같이 성장해 나가야 한다. 피해자에게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뒤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김유선 인권기자

진실과 마주하는 인권 전시 ‘동백이 피었수다’

제주4·3과 여순항쟁, 그리고 대전 산내 골령골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에서 주최한 '동백이 피었수다'가 7월 23일 종료했다. 대전 근현대사진전시관 기획전실에서 진행된 이번 전시는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했으며 대전시민 뿐 아닌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찾았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은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기획된 이번 전시에서 최근 인기리에 방영했던 한 드라마로 친숙해진 제주도 방언 '~수다, 어멍, 아방, 삼춘' 등의 단어가 많이 보였다.

이찬효, 정기엽, 손유진, 현아선, 임재근, 박성태, 박금만, 이수진, 주철희, 박진우, 이하진 등 11명의 작가가 조형물, 영상, 인두화, 연필화, 사진, 보리아트, 기록물, 스토리텔링으로 엮은 책자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전시했다.

비극적인 현장과 억울한 희생자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 전반적으로 선동적이거나 과장되지 않았다. 심지어 설



▲ 지난 2일 대전 근현대사진전시관에서 '4·3과 여순-동백이 피었수다' 대전 전시 개막식이 열렸다.

적이게 아름답기까지 했다. 생생한 현장을 담은 사진과 국내외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비극의 역사를 담담히 담아냈는데도 더 큰 슬픔과 분노가 느껴졌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보다 비극적이고 비인권적인 일이 있었을까...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학살의 슬픈 역사는 잘못된 권력에 눈먼 위장자들에 의해 오랜 시간 철저히 은폐되고 왜곡되어 왔다. 들어는 봤지만 그 실체에 대해 명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제주4·3사건과 여·순항쟁. 또 대전 시민조차 그 존재를 잘 몰랐던 '산내 골령골' 역시 잊지말고 기억해야 할 우리의 비극적인 역사다.

모든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대전 산내골령골과 대전 형무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제주4·3과 여·순항쟁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태 혹은 사건으로 불렸다. 심지어 발생 당시부터 꽤 오랜 기간을 폭동과 반란이라 치부했기에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쓰라린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를 통해 진상규명의 물꼬를 튼 이래 20년이 넘었지만 얼마나 진실이 밝혀졌는지, 국민의 역사인식 속에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았는지 알 수 없다.

제주4·3은 '단독정부, 단독선거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시작된 무장봉기다. 여순항쟁은 같은 해 10월 19일, 여수 주둔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하지만 일제의 압제에서 광복이 된 직후 미군정과 우리나라 정부수립 과정에서 친일과 청산과 남과 북의 통합을 이루지 못한 데 사건 발생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중요한 사실은 많은 죄없는 국민이 국가에 의해 소중한 목숨이 희생됐다는 것이다. 명확한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글·사진 조강숙 인권기자

독자투고

시대가 요구하는 목소리 '학생인권조례'

청소년이 말하는 인권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지난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이야기했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 선거에서 늘 예민한 주제로 다뤄지며 많은 오해와 의구심을 일으켰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대전시 교육감 후보 간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나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찬반을 논의할 문제가 아닌 어느 후보도 빠짐없이 공약으로 내세워야 하는 미래지향적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주제가 앞서서도 이야기했듯 많은 오해와 의구심을 일으키는 주제인 것은 틀림없다.

그 예시로는 첫 번째, 통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주게 되면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는 입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 나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다. 현재 시대 흐름이 변화함에 따라 그에 맞는 시대적



요구도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점점 주입식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 교육을 바꾸고 있으며 이에 맞게 학교의 역할도 주체가 아닌 보조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피선거권과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바뀌었으며, 심지어는 만 16세 이상은 정당 가입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주지 않고 군대처럼 억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는 말은 학생인권조례 반대 근거에 적합하지 않다.

두 번째, 동성애 찬성 제도라는 오해와 관련된 부분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자율성 부여와 인권 보장을 위해서 시작된 정책 중 하나이다. 그런데 간혹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후보와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취지를 동성애 부분과 엮어서 이야기한다. 그러다 보니 언론은 또 이것을 정치적인 상황으로 엮어서 이슈화를 시켜 많은 시민이 무분별한 화제성 보도에 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정말 심각한 악순환이며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끝으로 앞서서도 이야기했듯 현재는 급격한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가 진행되며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학생과 청소년의 미래 삶을 위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목소리에 기울여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다. 대한민국의 100년을 책임질 교육감 당선자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무엇인지 살피고 진정 청소년과 학생에게 필요한 인권이 무엇인지 살피고 좋은 교육 정책을 실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생에게는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

박준우 학생

무분별한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

뉴 미디어 OTT 전성시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겪으며 많은 것들이 변했다. 비대면 활동과 뉴 미디어 중 하나인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OTT(Over The Top)의 범람도 그중 하나다. 특히 '넷플릭스'는 전 세계 최고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이자 국내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뉴 미디어 OTT 전성시대는 새로운 유행과 이슈를 선도하고 있다.

OTT는 한류 미디어 문화 확산에도 단단히 한몫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 가입자가 엄청나게 늘었고 대한민국 미디어 콘텐츠들이 세계인의 큰 사랑을 받게 된 것이다. '오징어 게임', '지옥'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그렸던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의 영상 콘텐츠들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많은 수의 외국인이 한글 배우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소식은 이제 놀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OTT의 우려스러운 면도 존재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오징어게임'의 경우 청소년은 물론 유치원생들까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인 이 드라마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들은 OTT뿐 아니라, 다양한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이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넷플릭스가 진출하지 않은 중국에서 다수의 이용자가 '오징어게임' 영상을 틱톡에 올리며 공유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실제로 영상 플랫폼 검색창에 '오징어게임'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일부 장면을 로그인 없이 손쉽게 시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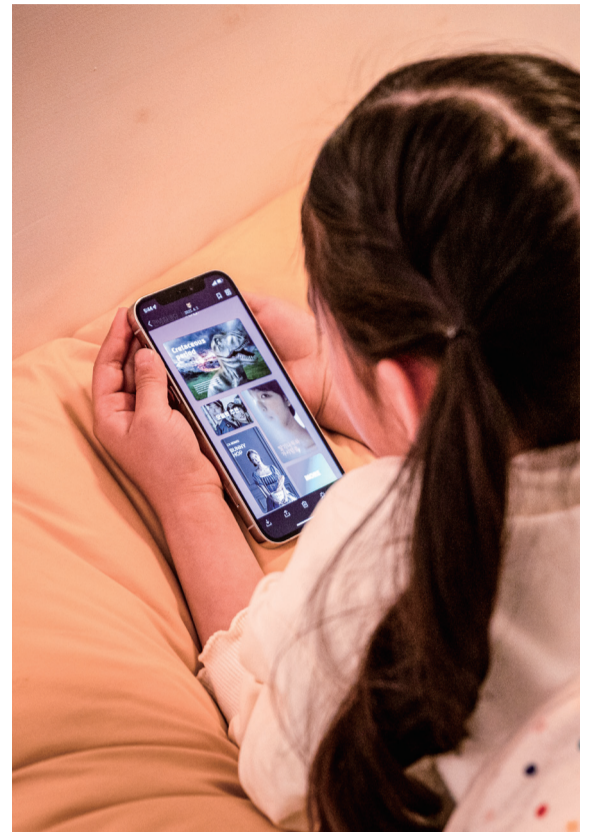
넷플릭스 시리즈 중 하나인 '지금 우리 학교는'도 국내 아

동·청소년에게도 큰 화제가 됐다. 좀비 바이러스가 시작된 학교에 고립되어 구조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살아남기 위한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인 이 드라마 역시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콘텐츠이지만 '청소년 관람 불가'등급을 받은 성인물이다. 이를 두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 플랫폼이 제공하는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콘텐츠에 아동·청소년이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아이들이 폭력성과 선정성이 짙은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많은 학부모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초등학생과 청소년인 아이들이 온갖 자극적인 방송을 다 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시청에 관한 각별한 관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토로한다.

목숨을 가볍게 느끼게 한다거나, 욕설이나 폭력 수위, 선정성도 높다. 요즘 아이들이 매체를 접하는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많은 전문가가 아이들이 미디어에 과하게 노출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플랫폼 차원에서 영상의 내용물을 100%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아이들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통해 미디어에 과하게 노출되는 환경을 축소하고, 부모 입장에서 더 확실하게 아이들의 시청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식일지 모른다.

향후 지속 성장 시장으로 보고 있는 OTT 시장에서 콘텐츠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시청자를 잡기 위해 좀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선보일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OTT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해 영상물 등급 제도는 여전히 그 의미가 유효해야 할 것이다. OTT 플랫폼이 제공하는



자녀 보호 기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각 콘텐츠가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안내가 시청자에게 제공되며, OTT 환경에 맞는 철저하고 새로운 심의 규제와 청소년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이희내 인권기자

인권 칼럼

일상이 회복되는 내일을 기대하며

현재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방역을 위해 실시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펴고 있다. 이에 지난 5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을 허용했다. 여전히 많은 수의 시민이 혹시 모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일상 회복', '허용'이라는 단어만으로 곧 마스크가 사라질 것 같아 반가웠다.

우리는 2년 넘게 마스크를 착용했다. 코로나 베이비라고 불리는 3~5세 유아들은 외출할 때면 신발을 신듯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간다. 그만큼 우리는 철저히 방역에 힘을 썼다. 마스크는 본인뿐 아닌 타인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실시했던 대표 방역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대전시 정책에 잘 따라준 우리 대전 시민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

지속해서 시행해온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자영업, 프리랜서 등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손실도 상상 이상의 힘든 나날이었다. 그동안 사회 활동의 제한으로 사회 각층에서의 부작용이 발생했던 지난 2년간을 뒤로하고 이제라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외부 활동 시 마스크를 벗는 시책은 너무 좋은 우리의 일상을 되찾는 기쁨과 행복일 것이다.

필자의 경우 팸투어 등 여행을 좋아한다. 얼마 전 다녀온 여행에서 일부 외부 활동에서 마스크를 잠시 벗고 맑은 공기를 마셨던 기억이 있다. 코로나19가 완전 종



식된 건 아니기에 아직까지 조심하지만 최소한의 거리두기를 하며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었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급기야 2020년 올림픽마저 연기되고 각종 국제행사가 취소되는 상황이 초래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1월 최초의 감염자가 확진된 이후 얼마 전까지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지역 감염 확산이 감소하는 추세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비슷한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와 시 정책에 잘 따라서 대처한다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모두 백신 접종 등 기본적인 방역을 지키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를 자신 있게 맞이해야겠다. 마스크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김태현 인권기자

헌법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찾다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센터 이학준 센터장

예전에 승진시험에서 다른 과목에 비해 헌법 점수가 낮게 나와 씁쓸한 기억이 있다. 전문(前門)과 130개로 구성된 조문을 여러 번 읽었는데, 곁핥기로 공부한게 원인이었다. 딱딱하고 어렵게 여겨졌던 헌법이 인권과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새삼 느꼈다. 헌법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지역에서 헌법 전도사로 불리는 이학준 인권강사를 찾았다. 이학준 강사는 대전시인권센터 인권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센터장을 맡고있다.

헌법이란 무엇이며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헌법은 나라의 주인인 대한민국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바로 나와 나, 우리를 위한 공동체 최고의 약속이 헌법이지요, 헌법은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가장 상위에 해결 지침을 정해놓은 문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회문제는 곧 헌법의 문제인 거죠, 따라서 헌법은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권보장으로의 직접 통로가 됩니다. 인권이 보장 되려면, 시민들이 헌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헌법을 공부하겠다고 마음먹고 '헌법 알리기' 전도사가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담겨있는 핵심 정신은 무엇 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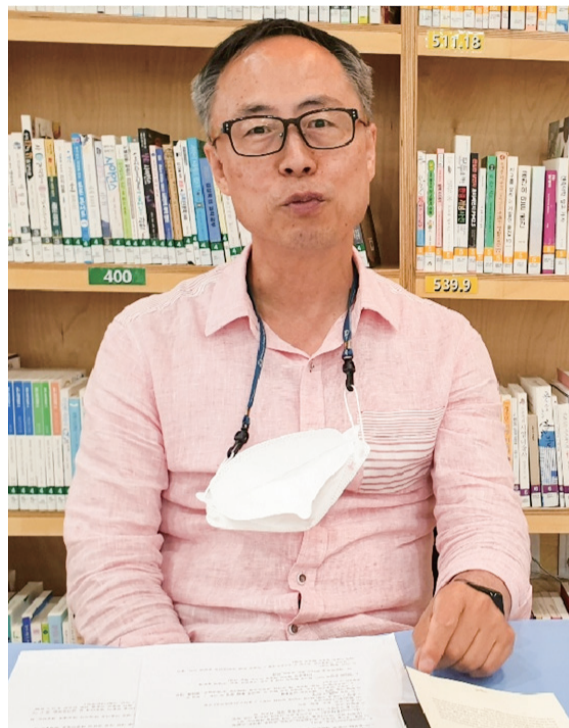
'인권'입니다. 헌법을 두 글자로 축약하면 '인권', 네 글자로는 '인권보장'이에요. 그래서 '헌법을 지킨다'라는 말은 '인권을 지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헌법은 인권의 목록이자 인권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헌법에서의 국민기본권과 세계인권선언에서의 인권은 같은 의미인가요?

세계인권선언에서의 인권은 넓은 의미의 인권, 헌법에서의 국민기본권은 좁은 의미의 인권이라 볼 수 있어요. 넓은 의미의 인권은 헌법의 유무, 국적과 관계 없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권리이구요.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권은 아직 기본권의 지위를 얻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동성(同性)간의 결혼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기본권의 지위를 얻지 못해, 인권이 안고 있는 숙제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의 의무주체는 국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란 무엇이며 인권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옛날엔 국민이 왕(국가)의 행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지금은 아니죠. 국가라는 건 우리 국민의



▲ 이학준 인권강사

행복을 위한 수단입니다. 국가 존재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음을 조금이라도 잊어서 안 돼요. 일반 공무원, 교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등이 그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죠. 만을 국가가 국민이 헌법을 통해 명령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나서서 그런 국가를, 정부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또한 국민의, 헌법의 명령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국가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공화국이란 어떤 나라 인가요?

민주주의의 의미는 모든 국민, 즉 평등한 존엄성을 가진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통치하는 체제입니다. 공화국이라는 말에는 국가는 모두의 것이며, 모든 국민을 위한 나라여야 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 전체의 공익을 추구하고, 더불어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나라라는 뜻이 담겨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구요.

인권개선과 관련하여 혹시 기억하고 계신 위원 판결이 있나요?

동선동본 금혼 규정, 본인 확인 인터넷 실명제 위반 등 많이 있죠. 최근의 것으로는, 양심적 병역(집중) 거부 헌법불합치 판결이 생각납니다. 2018년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입니다. 이렇듯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권을 개선하고 더 좋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미진한 내용이 있다면?

현재의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 직후 개정됐죠. 비교적 오래되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점이 있는거죠. 하지만 보완할 내용도 있어요. 우선 유신헌법의 전재를 청산해야죠. 87년 이후 사회적 기본권이 크게 확장되었는데 그 내용도 담아야 하고요. 그리고 정보화, 세계화, 기후변화로 생태위기 등의 새로운 이슈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헌법 개정이 필요해요. 아무튼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21세기 사회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헌법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더 나은 민주공화국으로 만들 책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 주권자 국민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 어른시민이 어린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저는,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서 헌법을 읽고 공부하는 시민모임, 그걸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글·사진 최봉호 인권기자

인권 영상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Daejeon Human Rights Center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동권'



김시연, 윤성은 인권알림이

여러분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죠? 최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많아지고 있지만, 유아차와 휠체어를 이용해서 버스를 탈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대전복지공감과 함께 직접 휠체어로 버스를 타봤어요! 궁금하시죠? 인권알림이단의 두번째 '이동권 콘텐츠'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보기
QR코드 ▶▶





2022 대전광역시 인권공모전

6.13.-8.21.

접수기간

2022. 6. 13.(월) - 8. 21.(목)

공모분야 포스터 / 에세이

공모주제

모두 함께 배려하고 누리는 인권도시 대전

- 대전이 앞으로 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어떤 점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표현한 작품
- 폭력과 차별, 혐오가 사라진 희망찬 대전을 묘사한 작품
-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작품

응모자격

전국 단위/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개인 및 단체(3인 이내)

* 단체의 경우 시상금은 개인과 동일하며, 단체명으로 상장 수여

접수방법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홈페이지 www.djhr.or.kr

결과발표 2022. 9. 30.(금) 예정

시상내용 대전광역시장상 등 25점 수여

(단위 : 천 원)

부 문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부문별 상 금
		각 1점	각 2점	각 2점	
인 권 포스터	초등부-저(5점)	500	300x2	200x2	1,500
	초등부-고(5점)	500	300x2	200x2	1,500
	청소년부(5점)	500	300x2	200x2	1,500
인 권 에세이	청소년부(5점)	500	300x2	200x2	1,500
	일반부(5점)	600	400x2	300x2	2,000
합 계		2,600(5점)	3,200(10점)	2,200(10점)	8,000

* 접수 작품 수 및 작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